

대선 앞둔 여야, 호남 민심잡기 조기점화

국힘, 불모지서 지지율 20%대로...당권주자들 오는 30일 광주 '공약' 관심 덧밭 위협받는 민주당, '야권바람' 차단에 안간힘...민심청취 프로젝트 가동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호남 민심잡기 경쟁이 조기 점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불모지인 호남에서 전례없이 정당 지지율 20%를 넘어서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덧밭을 수성하기 위해 야권의 바람 차단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지율 상승 여세를 몰아붙이기 위해 당권 주자들이 광주로 향하고 있다.

26일 광주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5월3주차(17~18일, 20~21일) 주간 집계 를 한 결과 호남권(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21.9%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9.4%포인트 오른 수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이 과거 각종 선거에서 호남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 넘기기가 목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5·18 민주묘지 무릎사과 이후 전향적인 호남 구애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호남 지지율 상승은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이 지난 7일 취임 이후 2차례 광주를 방문하는 등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 직후의 결과여서 의미심장하다.

정운천·성일종 의원은 5·18유족회가 주관한 추모제에 사상 최초로 초청 받았고, 민주당·국민의힘 대표가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송정역에서 20여분 간 만나 오월공동체 정신의 상징인 주먹밥을 함께 먹으며 국민통합을 다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 상승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야권의 호남민심 끌어안기 전략은 한층 가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1차 컷 오프를 통과한 당권주자 5명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첫 합동연설회를 한다.

당권주자들이 민심을 잡기 위한 호남 공약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연설회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의 '서진전략'을 한층 강화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덧밭을 위협받는 민주당은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5일부터 광주 8개 지역위원회별로 소규모 간담회, 찾아가는 민심 경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시당 차원의 '찾아가는 민

주당'은 27일 오후 3시30분 서구 상무역사거리에서 송갑석 시장위원장이 민심을 듣는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최근 김승남 도당위원장 주관으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국민 속에서 들겠습니다' 출범식을 열고 부동산과 코로나 극복, 지역현안 등 핵심 민생 과제에 대한 당원 및 국민여론 청취에 나섰다.

민심경청 프로젝트 '국민 속에서 들겠습니다'는 25일부터 6월1일까지 8일간 이어지며, 도당 소속 10개 지역위원회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다중집합장소 등지에 '찾아가는 민주당' 부스를 설치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한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직접 만나서 소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면서 "빠를 쫓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에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때 내년 대선 승리와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청문회, 여야 격돌 '정치 중립·전관예우' 공방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는 앞서 증인,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재충돌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결렬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서민 단국대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등 2명만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주장한 24명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총정 아래 줄여서 증인 한 명, 참고인 두 명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에서 거부했다"며 "증인으로 요청한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사진행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양당에서 이야기했던 참고인 한 명씩이 채택됐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했던 증인들이 재판에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 수사나 조사에 관여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며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고수임료 전관예우 논란부터 아들이 공기업 취업 시 자기소개서에 그의 직업을 '검사장'으로 기재한 부분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전주해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아들이 지난 2017년 공공연구기관(취업 서류) 양식에도 없던 검사장 개서를 내고 합격했다는 보도가 있고, 2019년 이직할 때도 아빠 찬

스를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라이프자산운용·유틸머스(사건 변호가) 전관예우로 불거지고 있다. 굉장한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부를 불신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며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로펌에서 월 2900만원을 받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에 영향력 행사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미들맨'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이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답변을 인용해 "결론적으로 라인이나 유틸머스 자체를 변호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 않나"고 말하며, 아들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도 대해서도 "특별히 모르고 있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것이지 않나"고 되물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아들 논란과 관련해" 채용 예정 인원은 4명인데 지원자는 3명이었고, 서류전형에서 2명을 뽑아 최종까지 이르렀다"며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객관적 내용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 경력·이력에 비춰 봤을 때 2000여만원은 사실 크지 않은 전관예우로 볼 수 없는 월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이낙연 "심한 경우 한 사람이 760채...누가 봐도 정책 빗나가"

"수요예측 명확하지 못해 만성적 수요 부족·가격상승 원인 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이 착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빗나간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표적인 게 임대차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임차인 보호

를 위해 그 정책을 썼는데 결과는 오히려 매물잡김이었고, 특혜가 조세 도피처로 가능했다"며 "심한 경우 한 사람이 760채의 집을 갖고 안 내놓고 있다. 누가 봐도 정책이 기대에 빗나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뒀 수요 억제와 투기 엄단에 비중을 뒀다"며 "빠르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 수요예측이 명확하지 못해 만성적 수요 부족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재산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재산세는 완화 구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부터 논의했는데 미뤄졌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중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소병철, 현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 국회 나온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민의와 동떨어진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대법원 역시 국민의 법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하지 않도록 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삼김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재가 민의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그 전달통로가 되어줄 현재 사무처장이 재판관 자격으로 재판관회의에 참여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진석, 임호선, 송기현, 김종민, 이장선, 양정숙, 조웅천, 김정호,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